Digital & IT

악성프로그램방지법 찬반 논란

贊 "DDoS 공격차단" 反 "개인 권리 침해"

지난 7월7일 국방부와 외교부 등의 국가 주요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대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이 국가 권력이 사이버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 자산보호위해 좀비 PC 확산 막아야

PC사용자·기업 사용권 제한은 과도한 규제

◇"인터넷 민간 자산 보호해야"=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있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삭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법' 제정을 최근 추진키로 했다.

일명 '좀비 PC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악성코드 전파의 숙주로 악용되는 좀비 PC확산을 방지해 디도스 공격 대란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상은 전자정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과 개인 PC 이용자들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PC방은 물론 공용 PC를 가진 민간기업은 PC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항상 최신 보안패치를 내려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 PC의 인터넷접속을 제한해 영업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보안이 취약한 소프트웨어(SW)는 강제로 판매를 중지시키고, 침해 대응 사고 시 언론사·통신사 등이 일반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디도스 공격으로 인터넷 침해 사고가 사이트들의 장애를 초래하고 감염된 일부PC의 데이터를 파괴했다"며 "민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터넷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대책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률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이버 프라이버시 침해 안 된다"= 하지만 법률안의 내용 중 상당수가 PC 사용자와 기업의 사용권을 규제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과도한 규제와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 서구 금호월드 H업체 관계자는 "취약한 보안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자금력이 월등한 대기업보다 중소업체가 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실제 침해사고 발생 시 언론사, 이통사, 포털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등이 사고 상황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명시한 것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강제력을 너무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긴급 침해사고 위험시 방통위가 ISP에게 좀비PC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조영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국장은 "PC방의 정보보호 수준이 이번 디도스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면서 "PC방 등 공용PC의 보안수준이 낮으리라는 관단은 편의주의적 행정에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희망 동네 만듭니다

광주신세계 (대표 이장환)가 16일 오전 서구 금호1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련한 '희망동네 만들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오색 풍선을 날리고 있다. 신세계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노인들을 모시고 자장면, 영정사진, 진료, 이발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 행사를 2년째 해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석 선물은 우리 농산물로"

삼성 등 대기업들 계열사에 "신토불이 이용하라" 당부

일부 대기업들이 올 추석 선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캠페인에 나선다.

이상대 삼성물산 부회장은 16일 그룹 사장단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번 추석 선물은 검소하게 하되 이왕이면 우리 농수산물로 해주셨으면 한다"고 사장단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60여 개에 달하는 모든 삼성 계열사들은 직원이나 협력업체 등에 추석선물을 할 일이 있으면 우리 농산물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업들도 우리 농산물 선물 보내기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SK건설은 이번 추석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사과와 밤으로 구성된 농산물 선물세트를 주기로 했다.

GS칼텍스도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취지로 계열 주유소 운영자 등 5천여 사업 파트너에 추석 선물로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선물세트를 구입해 주기로 했다.

앞서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지난 10일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장충기 삼성 브랜드전략위원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기승 현대그룹 사장 등을 만나 기업들이 추석 선물로 우리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전남경총 공식 출범

전남경영자총협회(경총)가 광주전남 경영자총협회에서 분리돼 공식 출범했다.

전남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이달 10일 법인 등기, 11일 사업자등록을 각각 완료함으로써 회원사 모집 등 조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경총에는 모두 14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민수 동양건설㈜ 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지난 3월 26일 창립 발기인대회를 하고 설립을 추진해 온 전남경총은 그동안 광주전남경총의 일부 반대에 부딪혔으나 지난 4월 광주전남경총이 총회와 정관변경을 통해 명칭을 광주경총으로 바꿈에 따라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민수 전남경총 회장은 "전남 경총 출범을 계기로 회원사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전통시장 살리기 온라인 상품권 판매 총력

광주시가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회복지시설 방문,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는 한편 직속기관과 사업소, 각 자치구 및 대학 등 유관기관에 판매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상품권은 시가 중소기업청, 전국상인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발행하며, 5천원·1만원 등 소액권과 3만원~10만원까지 고액권이 있다. 이 지역 새마을금고 37곳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 39곳 등 전국 660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령자용 보행차 절반이상 '불량'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령자용 보행차 및 보행보조차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하면 이를 사용하는 노인들이 넘어져 보행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6일 시판되는 고령자용 보행차 11개 제품과 보행보조차 19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5개 제품은 전도시험 결과 앞, 뒤 또는 옆으로 쓰러져 사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행차의 경우 11개 제품 중 2개는 아예 자율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었으며 이를 포함한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보행보조차 역시 19개 제품 중 4개가 불법이었고 11개 제품은 핸들, 브레이크 등이 안전기준에 못미쳤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보입니다. 3.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 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